골목상권·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보고서

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685명의 경영 체감도, 정책 이용 과정의 진입 장벽, 최우선 지원 수요 및 현장 건의사항(639건) 종합 분석

조사 대상	조사 기간	조사 방식	문항 구성
전국 소상공인·자영업자 685명	**2026. 8. 28. ~ 9. 30. (34일간)**	**온라인 설문조사 (모바일·웹)**	**총 17문항 (객관식 16 · 주관식 1)**

핵심 지표 요약

전체 응답자 N = 685명 기준

최근 1년간 매출 감소 (문항 7)

64.5%

442명 감소 (크게 35.8% · 다소 28.8%)
매출 증가 응답은 11.7%(80명)에 불과

1인 사업장 비중 (문항 6)

60.3%

'나 홀로 사장님' 413명
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3.9%

절차 복잡·미인지로 미이용 (문항 10)

52.0%

신청 절차 어려워 포기 33.0% (226명)
몰라서 이용 못 함 19.0% (130명)

최우선 희망 정책 1·2위 (문항 12)

68.0%

저리 자금·융자 지원 확대 38.4%
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 29.6%

상권 활성화 핵심 과제 (문항 14)

57.5%

주차·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31.5%
온누리상품권 등 소비 유인책 26.0%

현장 의견 미반영 평가 (문항 15)

53.9%

부정 평가 369명 (반영됨 긍정은 13.4%)
현장 체감도와 정책 설계 간 괴리 확인

조사 결과 3대 핵심 시사점

01. 경영 여건 진단

매출 하락(64.5%)과 고정비 상승(38.6%)의 복합 위기: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'매출 감소·경기 침체(48.3%)'이며, '임대료 등 고정비(19.3%)'와 '인건비·원재료비 상승(19.3%)'이 뒤를 이음. 특히 상가건물(68.9%)과 역세권 상점가(67.9%)의 매출 감소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.

02. 정책 전달 병목

인지율은 77.4%이나 실제 이용률은 36.1%에 그침: 응답자의 33.0%(226명)가 '신청·접근 절차가 어려워 포기'했다고 응답함. 1인 사업장(60.3%)과 4060 중장년층(86.3%)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복잡한 서류 요건과 '오픈 직후 선착순 마감' 방식이 진입을 차단하고 있음.

03. 제도 사각지대

업력 7년 초과·성실상환자·비지정 골목상권의 소외: 응답자의 56.5%가 업력 5년 이상이나, 창업 7년 초과 시 다수 지원에서 제외됨. 또한 전통시장·골목형상점가 외 일반 주택가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배제, 제조 소공인의 매출액 기준 역차별 해소가 핵심 과제로 도출됨.

P.1 조사 개요·요약 | **P.2** 기초 특성 (문항 1~6) | **P.3** 경영 실태·교차분석 (문항 7~8) | **P.4** 정책 평가·수요 (문항 9~16) | **P.5** 주관식 분석·제언 (문항 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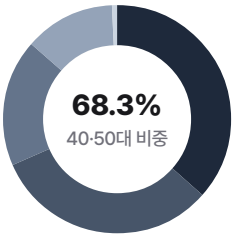
응답자 및 사업장 기초 특성 (문항 1 ~ 문항 6)

전체 응답 N = 685명

문항 1 귀하의 연령대는?

40·50대 68.3%, 60대 이상 18.0%

응답자의 86.3%가 40대 이상 중장년·고령층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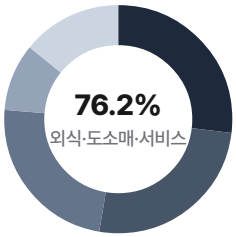


50세 ~ 59세	250명	**36.5%**
40세 ~ 49세	218명	**31.8%**
60대 이상	123명	**18.0%**
30세 ~ 39세	88명	**12.8%**
19세 ~ 29세	6명	**0.9%**

문항 3 귀하의 업종은 무엇입니까?

3대 생활업종 76.2%, 제조 9.5%

외식·도소매·서비스업 중심이나 제조·교육·운수 등 비전형 업종도 23.8% 참여



외식업(음식점·카페)	184명	**26.9%**
도소매업(소매·시장)	176명	**25.7%**
서비스업(미용·숙박)	162명	**23.6%**
제조·생산업	65명	**9.5%**
기타(교육·운수·공예)	98명	**14.3%**

문항 2 귀하의 거주 지역은? (전국 16개 시도 분포)

비수도권 73.0%(500명) · 수도권 27.0%(185명)

영남권(27.0%), 수도권(27.0%), 호남권(26.1%), 충청권(10.9%), 강원·제주(8.9%) 순으로 전국 고른 표집

전남광주통합특별시	128명	**18.7%**
부산광역시	115명	**16.8%**
경기도	79명	**11.5%**
서울특별시	63명	**9.2%**
강원특별자치도	53명	**7.7%**
전북특별자치도	51명	**7.4%**
인천광역시	43명	**6.3%**
대전광역시	40명	**5.8%**
경상남도	22명	**3.2%**
대구광역시	21명	**3.1%**
충청남도	19명	**2.8%**
경상북도	18명	**2.6%**
충청북도	14명	**2.0%**
울산광역시	9명	**1.3%**
제주특별자치도	8명	**1.2%**
세종특별자치시	2명	**0.3%**

문항 4 사업체 위치 상권 유형

골목상권·상가건물이 66.7% 차지

골목상권(주택·이면)	280명	**40.9%**
상가건물·복합시설	177명	**25.8%**
전통시장	86명	**12.6%**
역세권·중심상점가	53명	**7.7%**
기타(공단·외곽·온라인)	89명	**13.0%**

전통시장(12.6%) 외 **일반 골목·상가건물·공단 점포(87.4%)**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상권 지원에서 소외 호소.

문항 5 사업 운영 기간(업력)

5년 이상 장기 운영자가 56.5%

10년 이상	232명	**33.9%**
5년 ~ 10년	155명	**22.6%**
1년 ~ 3년	120명	**17.5%**
3년 ~ 5년	99명	**14.5%**
1년 미만	79명	**11.5%**

응답자 과반이 5년 이상 숙련 사업자이나, **'창업 7년 이내' 지원 제한**으로 인해 장기 생존 점포가 역차별을 겪음.

문항 6 종사자 수 (본인 포함)

1인 점포 60.3%, 4인 이하 93.9%

1인 (나 홀로 사장님)	413명	**60.3%**
2 ~ 4명	230명	**33.6%**
5 ~ 9명	28명	**4.1%**
10 ~ 19명	10명	**1.5%**
20명 이상	4명	**0.6%**

10곳 중 6곳이 1인 점포여서 영업시간 중 기관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작성이 불가능한 구조임.

경영 위기 체감도 및 업종·상권별 교차분석 (문항 7 ~ 문항 8)

전체 응답 N = 685명

문항 7 최근 1년간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?

N = 685

응답자의 64.5%(442명)가 매출 감소 경험 (증가 11.7%의 5.5배)

매출 감소 64.5% (442명) | 변화 없음 23.8% | 증가 11.7%



크게 감소하였다	245명	**35.8%**
다소 감소하였다	197명	**28.8%**
큰 변화가 없다	163명	**23.8%**
다소 증가하였다	67명	**9.8%**
크게 증가하였다	13명	**1.9%**

3명 중 1명 이상(**35.8%, 245명**)이 '크게 감소'를 응답해 단순 경기 둔화를 넘어선 유동성 위기 상황임.

문항 8 현재 사업 운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?

N = 685

매출 부진(48.3%)과 고정비·운영비 상승(38.6%)의 이중 압박

매출 감소·경기 침체	331명	**48.3%**
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	132명	**19.3%**
인력난 및 인건비·원재료비 상승	132명	**19.3%**
온라인·대형 유통과의 경쟁	35명	**5.1%**
기타 직접 기재 (대출이자·배달수수료 등)	55명	**8.0%**

기타 직접 기재(55명) 세부 내역:
· 대출 원리금 상환 및 고금리 이자 부담 (18명)
· 배달앱(배민·쿠팡)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 (9명)
· 온누리상품권 가맹 불가에 따른 고객 이탈 등 (28명)

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**임대료·인건비·원재료비 등 경직성 비용(합계 38.6%)**이 수익성을 잠식하는 구조.

심층 교차분석 상권 유형별 매출 감소율 및 업종별 핵심 애로사항 비교

문항 3·4·5 × 문항 7·8 교차집계

상권과 업종 특성에 따라 위기 체감도와 핵심 비용 부담 요인이 뚜렷하게 차별화됨

① 상권 유형별 최근 1년 매출 변화 (문항 4 × 문항 7)

상권 유형 (응답수)	크게 감소	다소 감소	감소 계	변화없음	증가 계
상가건물·복합시설 (177)	39.0%	29.9%	**68.9%**	19.8%	11.3%
역세권·중심상점가 (53)	**45.3%**	22.6%	**67.9%**	24.5%	7.5%
전통시장 (86)	30.2%	34.9%	**65.1%**	23.3%	11.6%
골목상권(주택가) (280)	33.9%	26.1%	**60.0%**	26.8%	13.2%

· **상가건물(68.9%)과 역세권(67.9%)**의 매출 감소율이 전통시장(65.1%)보다 높음. 높은 임대료·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전통시장 중심의 온누리상품권·상권활성화 지원에서 배제된 영향이 큼.

② 주요 업종별 최대 애로사항 비중 (문항 3 × 문항 8)

업종 구분 (응답수)	매출·경기침체	인건비·원재료	임대료·고정비	온라인경쟁·기타
외식업 (184명)	**50.5%**	**26.1%**	15.2%	8.2%
도소매업 (176명)	**49.4%**	13.6%	18.2%	**18.8%**
서비스업 (162명)	**49.4%**	17.3%	**27.2%**	6.2%
제조·생산업 (65명)	**46.2%**	**27.7%**	12.3%	13.8%

· 2순위 핵심 애로사항은 **제조업·외식업(인건비·원자재비 상승 27.7%·26.1%), 서비스업(임대료 부담 27.2%), 도소매업(온라인·대형유통 경쟁 18.8%)**으로 명확히 구분됨.

③ 업력 및 연령대별 지원정책 접근성 격차 (문항 1·5 × 문항 10)

· 초기 창업자(1년 미만) 중도 포기 최고:
창업 1년 미만 점포는 실제 이용률이 **21.5%**에 불과하며, **39.2%가 절차 어려움으로 포기**(소득증빙 미비 등).

· 40대 사업자의 신청 포기율 37.6%:
40대 응답자(218명) 중 **37.6%가 신청 절차 중도 포기**. 청년(39세 이하) 우대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계선 연령층의 소외 심각.

· 30대·60대 이상의 정보 사각지대:
'정책을 몰라서 이용 못 함' 비율은 **30대(25.0%)와 60대 이상(22.8%)**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별 안내 채널 다변화 필요.

지원정책 이용 실태 및 향후 정책 수요 (문항 9 ~ 문항 16)

전체 응답 N = 685명

01. 정책 인지율 (문항 9)	02. 진입 장벽 이탈 (문항 10)	03. 실제 이용 완료 (문항 10)	04. 이용자 긍정 평가 (문항 11)
77.4% (530명 인지)	**52.0%** (포기 33%·미인지 19%)	**36.1%** (247명 이용)	**54.3%** (유효 435명 중 236명)

문항 9 정부·지자체 지원정책 인지도

인지 77.4% · 미인지 22.6%

	인원	비율
대체로 알고 있었다	218명	31.8%
들어본 적은 있다	185명	27.0%
잘 알고 있었다	127명	18.5%
잘 몰랐다	111명	16.2%
전혀 몰랐다	44명	6.4%

문항 10 지원정책 실제 이용 경험

절차 어려워 포기 33.0%

	인원	비율
이용해 본 적이 있다	247명	36.1%
신청·접근 절차가 어려워 포기했다	226명	33.0%
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	130명	19.0%
이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	43명	6.3%
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미이용	39명	5.7%

문항 11 지원정책의 경영 도움 정도

유효 응답(435명) 중 긍정 54.3%

	인원	비율
이용해 본 적이 없어 해당 없음	250명	36.5%
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(유효 34.7%)	151명	22.0%
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(유효 34.7%)	151명	22.0%
매우 도움이 되었다 (유효 19.5%)	85명	12.4%
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(유효 11.0%)	48명	7.0%

문항 16 지원정책 정보 주요 획득 경로

언론·SNS + 공단 59.7%

	인원	비율
언론·방송·SNS	227명	33.1%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	182명	26.6%
지자체·정부 공고문 및 홈페이지	111명	16.2%
주변 상인 등 지인	74명	10.8%
상인회·조합(8.2%) 및 기타(5.1%)	91명	13.3%

문항 12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 분야

융자 + 고정비 68.0%

	인원	비율
저리 자금·융자 지원 확대	263명	38.4%
임대료·고정비 부담 완화	203명	29.6%
판로 확대 및 온라인 진출 지원	73명	10.7%
폐업·재기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	59명	8.6%
디지털 전환(2.2%) 및 기타 직접기재(10.5%)	87명	12.7%

문항 13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식

직접지원 + 저리융자 74.3%

	인원	비율
직접 재정지원 (보조금·상품권 등)	272명	39.7%
저리 융자·보증 확대	237명	34.6%
세제 감면·유예	83명	12.1%
판로·마케팅 지원	57명	8.3%
경영 컨설팅·교육 지원	36명	5.3%

문항 14 상권 활성화 최우선 방안

주차인프라 1위 (31.5%)

	인원	비율
주차·편의시설 등 인프라 개선	216명	31.5%
온누리상품권 등 소비 유인책 확대	178명	26.0%
지역 축제·문화행사 연계 마케팅	109명	15.9%
상인회 등 자율 조직 역량 강화	63명	9.2%
청년 창업 유치(6.3%) 및 기타(11.1%)	119명	17.4%

문항 15 현장 의견 정책 반영도 평가

부정 53.9% vs 긍정 13.4%

	인원	비율
보통이다	224명	32.7%
그렇지 않다 (부정)	223명	32.6%
전혀 그렇지 않다 (강한 부정)	146명	21.3%
그렇다 (긍정)	65명	9.5%
매우 그렇다 (강한 긍정)	27명	3.9%

주관식 현장 의견 분석(문항 17) 및 5대 정책 개선 과제

주관식 유효 응답 N = 639건 (응답률 93.3%)

문항 17 자유 기술 의견 주요 주제별 분포

N = 639건 (중복 주제 포함)

금융 문턱·역차별 해소(22.8%)와 주차·상권 인프라(19.6%) 요구가 최다

1. 대출 문턱 완화 및 성실상환·업력7년+ 역차별 해소 — 146명 **22.8%**
2. 공영주차장 확충 및 상권·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— 125명 **19.6%**
3. 탁상행정 개선 및 현장 맞춤형·장기 지원 전환 — 100명 **15.6%**
4.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업종 사각지대 해소 — 95명 **14.9%**
5. 임대료·공과금·인건비(주휴)·배달수수료 경감 — 82명 **12.8%**
6. 선착순 마감 폐지·서류 간소화 및 정산 지연 해소 — 79명 **12.4%**

현장 소상공인 주요 건의 요지 (발췌)

실제 응답 원문 요약

자격 요건 중심의 경직된 심사와 선착순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집중

[선착순 접수 문제] "매달 정책자금 신청일 오전 10시에 장사를 접고 대기해도 3분 만에 마감되어 튕겨 나옵니다. 컴퓨터 빠른 순이 아니라 실제 현장 실사로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." (부산·전통시장 외식업)

[업력 7년 제한과 성실상환 역차별] "창업 7년이 넘으면 경영애로 자금이 끊겨 기관에서조차 '폐업 후 새 사업자등록증을 내오라'고 합니다. 연체 없이 버틴 성실상환자에게 대환·한도 우대가 필요합니다." (서울·제조전환)

[온누리 가맹 및 제조·서비스 사각지대] "지정 상권 바로 옆 일반 골목 점포는 온누리 가맹이 안 돼 손님을 뺏깁니다. 제조업도 원자재비 때문에 연매출 1억 400만 원을 넘겨 지원에서 배제됩니다." (울산 도소매·대구 제조업)

[기술 사업화 및 정산 지연] "수십 년 경력 기술 소상공인을 위한 시제품·사업화 트랙이 필요합니다." / "폐업 철거지원금이 신청 5개월째 미지급 상태입니다." (대전 기계설계·제주 외식업)

정책 제언 설문조사 결과 기반 5대 분야별 제도 개선 과제

현장 수요 기반 개선안

개선 분야	현장 문제점 및 관련 지표	핵심 제도 개선 방안
1. 정책금융 심사 및 대상 기준 개편	· 저리 융자 확대 요구 1위 (38.4%) · 업력 5년 이상 비중 56.5% (387명) · 금융 역차별 해소 건의 146건	· **'선착순 접수 마감' 폐지** → 접수 기간 내 신청 후 매출 감소율·시급성 기준 배분 · **'창업 7년 이하' 일괄 제한 폐지** 및 장기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·대환보증 한도 확대 · 장기 분할상환 전환 시 발생하는 고액 보증료(100~300만 원)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
2.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전달체계 일원화	· 절차 어려워 포기 33.0% (226명) · 몰라서 미이용 19.0% (130명) · 1인 점포 비중 60.3% (413명)	· 국세청 과세정보 자동 연동으로 **제출 서류 최소화 및 기관별 지원공고 창구 단일화** · 매장을 비우기 어려운 1인·고령 점포 대상 **'찾아가는 신청 도우미'** 운영 (브로커 차단) · 희망리턴패키지(폐업·철거지원금) 정산 심사 기한 단축 및 화재공제 보조금 상시 운영
3. 온누리상품권 및 업종 사각지대 해소	· 비전통시장 점포 87.4% · 소비 유인책 확대 요구 26.0% · 사각지대 해소 건의 95건	· 온누리상품권 가맹 요건을 **'지정 구역 중심'에서 '영세 매출 기준 개별 점포'로 완화** · 제조 소공인 지원 기준을 단순 매출액(1억 400만 원)이 아닌 **'원자재비 차감 부가가치'로 개편** · 숙련 기술 소상공인 '시제품·인증·양산 연계 트랙' 및 생활서비스업(뷰티 등) 기준 명확화
4. 고정비 직접 경감 및 수수료·노무 개선	· 직접 재정지원 선호 1위 (39.7%) · 고정비·운영비 애로 38.6% · 고정비 완화 요구 2위 (29.6%)	· 임대료·전기요금·공과금 등 **경직성 고정비 직결형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확대** · 민간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·배달비 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공 판로 지원 · 초단시간 근로 기준(주 15시간) 유연화 검토 및 장기 고용유지 사업장 4대보험 지원
5. 상권 주차 인프라 및 현장 소통 체계 구축	· 주차·인프라 개선 요구 1위 (31.5%) · 현장 의견 미반영 응답 53.9% · 인프라·자생력 건의 125건	· 골목상권·전통시장 인근 **공영주차장 확충 및 점심·저녁·배달차량 탄력 주정차 허용** · 일회성 행사 대신 **2~3년 다년도 상권 육성 사업** 및 골목형상점가 전용 예산 쿼터제 도입 · 상인회 운영 투명성 감독 강화 및 생업 종사자를 위한 모바일 상시 의견수렴 창구 제도화